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 + +

2001년 12월

2001년 12월

+ + +
+ + +

2001년 12월

2001년 12월

+ + +

2	2	2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	•	•	•	•	•
12	12	12	12	12	12

V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1년 12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25
제3장 2002년 경제전망	35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45
<특집> 2001년도 주요분야별 경제정책 결산	49

부록

주요경제통계	77
--------------	----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이인실

연구위원

배상근

선임연구원

김주호

김창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2002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현 거시경제정책 평가
2. 향후 정책방향

<특집> 2001년도 주요분야별 경제정책 결산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소비, 건설 등 내수 관련 지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의 회복조짐, 설비투자 감소폭 둔화 등 일부지표 개선 움직임

- 소비와 건설투자 관련지표들, 9월이후 회복세
 - 7, 8월중 회복세가 주춤하던 도소매판매지수는 9월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9~10월중에는 월평균 6.1% 증가(추석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기 위해 9~10월 평균 증가율을 이용)
 - 건설투자지표인 건설기성액도 증가세가 확대되어 9~10월중 평균 15.7% 증가
-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지표는 절대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부진하나 추세는 긍정적인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음.

전망과 정책과제

- 10월 생산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3/4분기(-1.8%)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9~10월 평균증가율은 1.8%로 나타나 6월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 지난 해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3/4분기중에는 두자리수 감소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자료)도 9~10월중에는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크게 둔화
- 재고증가율도 8월 이후 둔화되어 10월중에는 한자리수(4.9%)에 그침에 따라 재고부담도 감소하는 추세

<표 1> 주요 실물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0		2001							
	4/4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9~10월
GDP성장률(국민계정) (계절조정)	4.6 (-0.4)	8.8 (8.8)	3.7 (0.3)	2.7 (0.4)	1.8 (1.2)					
산업생산	7.6	16.8	5.0	1.6	-1.8	-5.7	-4.4	5.1	-1.3	1.8
재고	16.2	16.2	15.2	14.9	11.5	15.7	14.7	11.5	4.9	4.9
민간소비(국민계정)	3.2	7.1	0.9	2.9	3.4					
도소매판매	3.9	9.8	2.5	4.4	4.8	2.9	3.6	7.8	4.6	6.1
설비투자(국민계정)	8.1	34.3	-7.9	-10.8	-15.4					
설비투자추계	5.7	30.1	-6.3	-4.7	-12.2	-10.4	-19.4	-6.4	-4.4	-5.4
건설투자(국민계정)	-2.5	-4.1	1.4	0.9	8.3					
건설기성액	-1.2	-3.1	1.6	-0.4	7.9	-8.3	8.7	23.5	7.9	15.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동안의 시행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로 추가적인 경기악화 가능성은 적지만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는 저성장기조 불가피

- 현재 경기의 개선 움직임은 그동안의 금리인하와 9월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수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개인 저축률이 하락했으며 이것이 민간소비의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 요인으로 판단됨.
- 9월 이후 1, 2차 추경편성, 재정자금 집행 점검 및 독려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1~8월중 16.3조원(GDP대비 2.9%)이었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1~9월중에는 10.4조원(GDP대비 1.9%)으로 축소되어 한달사이에 약 6조원 감소
- 따라서 대외여건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GDP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50%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효과에 의해 받쳐지고 있는 내수중심 성장세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경기가 더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경제회복이 가시화되어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2. 대외거래부문

수출 : 큰 폭의 감소세 지속.. 그러나 감소폭 축소

- 하반기 들어 20%안팎이던 수출 감소폭이 11월에는 16.3%로 다소 개선

전망과 정책과제

- 월평균 수출금액도 소폭 증가 추세(3/4분기 118.8억 달러 → 11월 125.4억 달러)

<표 2> 수출(통관기준) 추이

	2000년		2001년					
	1~11월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11월
금액(억 달러)	1,572.9	1,722.3	401.0	383.7	356.5	121.8	125.4	1,388.5
증가율(전년동기비, %)	22.2	19.9	2.1	-11.6	-19.7	-20.1	-16.3	-11.7

자료 : 산업자원부

■ 지역별 수출동향

- 대미수출은 테러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크게 둔화
- 그러나 미국이외의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 3>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국가명	2000년					200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1~11.20	1.1~11.20
미 국	38.9	24.7	36.0	15.6	27.6	-0.4	-16.3	-21.8	-25.4	-12.1	-14.8
E U	25.5	16.9	19.4	5.4	15.7	3.7	-16.1	-18.6	-25.1	-24.5	-13.2
일 본	50.5	38.5	37.7	3.4	29.0	-0.6	-12.0	-29.5	-29.5	-24.9	-16.8
아세안	21.0	20.1	24.0	-4.2	14.2	-8.9	-19.5	-23.6	-21.3	-20.7	-18.1
중 국	37.2	37.3	44.4	23.1	34.9	10.6	2.8	-7.2	-7.7	-11.8	-0.3
중 동	29.3	20.5	21.4	6.6	18.6	6.7	-7.7	-11.8	-6.9	-20.9	-6.3
중남미	23.6	7.3	22.9	-12.7	8.4	30.1	9.1	-15.7	-0.9	-9.4	5.7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설비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1/4분기중 2.0% 감소한 수입은 2/4분기중에 13.4% 감소한데 이어 3/4분기에는 15.5%, 10~11월중에는 18.3%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

<표 4> 수입(통관기준) 추이

	2000년		2001년					
	1~11월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11월
금액(억 달러)	1,473.1	1,604.8	380.7	344.9	341.5	115.2	115.8	1,298.1
증가율(전년동기비, %)	37.4	34.0	-2.0	-13.3	-15.5	-18.3	-18.3	-11.9

자료 : 산업자원부

- 용도별 수입동향
- 자본재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설비투자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자본재 수입 감소세도 동반 둔화되는 모습
- 또한 울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 온 소비재수입은 내수회복 조짐과 함께 증가세 확대
- 반면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해 온 원자재 수입은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 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표 5> 용도별 수입과 관련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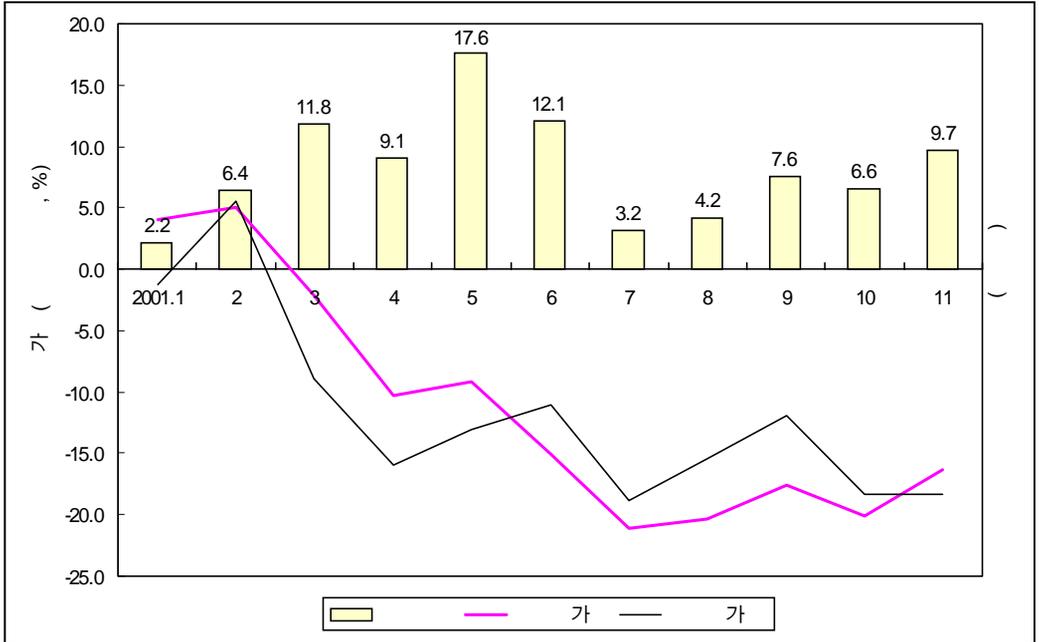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10월	11.1~11.20	1.1~11.20
원자재수입	34.0	1.1	-7.2	-11.1	-19.7	-19.5	-8.0
유가(두바이, \$/bbl)	26.18	23.70	25.15	24.04	19.68	17.66	-
자본재수입	35.8	-7.8	-24.9	-25.5	-21.6	-18.0	-19.7
설비투자추계	30.1	-6.3	-4.7	-12.2	-4.4		
소비재수입	26.7	5.4	4.1	4.8	2.1	12.2	5.0
도소매판매	9.8	2.5	4.4	4.8	4.6		

자료 : 산업자원부

무역수지 : 하반기 들어 축소되던 무역수지 흑자폭, 11월 들어 소폭 확대

- 6월 이후 수입 감소세보다 수출 감소세가 더욱 커지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
- 그러나 11월 들어 수출감소율이 축소된 반면 원유도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금액 감소율은 정체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소폭 확대

<그림 1> 수출입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경상수지 : 하반기 들어 흑자폭 감소.. 11월중에는 소폭 확대
 자본수지 : 하반기 들어 흑자전환.. 점차 흑자폭 확대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폭이 3/4분기 9.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데 이어 10월중에도 3.4억 달러에 그침. 11월중에는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소폭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월평균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상반기 14.3억 달러에서 하반기(7~10월)에는 9.3억 달러로 축소

- 서비스수지도 하반기(7~10월)중 4개월간 적자규모가 18.4억 달러에 이르러 상반기(13.3억 달러 적자)보다 악화
- 자본수지는 상반기중에는 IMF지원자금 상환의 영향으로 73.6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하반기(7~10월)중에는 9월을 제외하고는 흑자기조 지속
- 9월중에는 9.11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증권투자수지가 크게 적자를 보여 전체 자본수지는 9.7억 달러 적자
- 11월중에는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자본수지 흑자규모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

<표 6>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단위 : 억 달러

	2000년			2001년					
	1~10월	4/4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0월
경상수지	91.4	32.4	114.0	30.7	36.8	9.5	7.1	3.4	80.4
상품수지	139.7	42.8	168.7	34.6	51.0	29.9	14.9	7.4	122.9
서비스수지	-29.3	-8.8	-37.3	-5.5	-7.8	-16.1	-3.3	-2.3	-31.8
소득수지	-25.4	-2.7	-24.2	0.5	-5.4	-0.9	-3.3	-1.0	-6.9
경상이전수지	6.3	1.1	6.8	1.1	-1.0	-3.3	-1.2	0.3	-3.8
자본수지	133.6	-16.9	121.1	-37.1	-36.5	12.5	-9.7	0.5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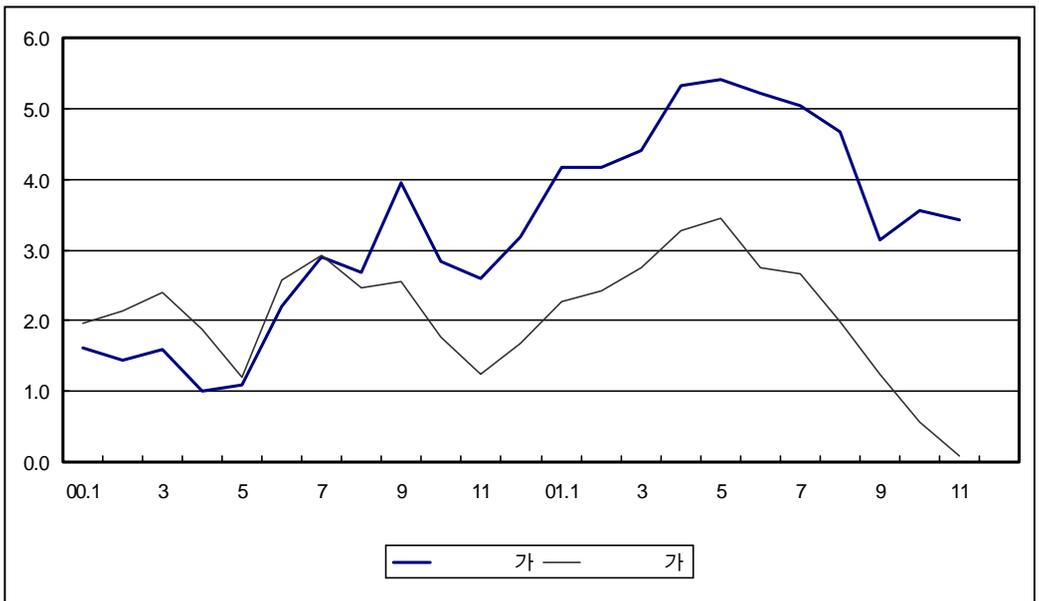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물가 : 수요부진 및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으로 증가세 크게 둔화

- 4월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물가가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임.
- 소비자물가는 5월 5.4%의 증가율(전년동월비)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9월부터는 3%대의 상승률을 지속
- 생산자물가 증가율도 5월 3.4%를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11월에는 0.1%까지 하락

<그림 2>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 물가가 이처럼 안정세를 지속하게 된 이유는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공공요금인상이 하반기 이후 자제되면서 공공서비스물가가 안정된데다 대내외 수요부진 지속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공산품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
- 공공서비스의 기여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1/4분기 45.2%, 2/4분기 32.0%로 높았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20%대로 하락
- 공업제품의 기여율은 상반기 30%를 상회했으나 3/4분기에는 25.6%, 그리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세를 보인 10~11월중에는 10%대로 급락

<표 7> 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전년동월비 기준)

단위 : %p, %

	총지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집세
2001년 1/4	4.2	0.0	1.4(33.3)	1.9(45.2)	0.6	0.3
2/4	5.3	0.8	1.7(32.1)	1.7(32.0)	0.7	0.4
3/4	4.3	0.9	1.1(25.6)	1.1(25.6)	0.7	0.5
10~11월	3.5	0.9	0.5(14.3)	0.7(20.0)	0.8	0.6

주 : ()내는 기여율
 자료 : 통계청

4. 통화 · 금융부문

금년들어 콜금리 네 차례(1.25%p) 인하 중 1%p가 3/4분기 집중

- 통화당국은 7월과 8월 콜금리목표를 0.25%p씩 인하한데 이어 9월 19일에는 미테러 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0.5%p 인하하는 등 금년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총 1.25%p 인하하였음.
- 4월중 7.7%까지 하락하였던 M3증가율은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수신 증가로 9월중 10.7%로 상승
- 금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M2 및 MCT 증가율은 평잔이월효과로 전월중 유동성공급이 확대된 10월에는 증가하였으나 전월중 통화가 환수된 11월에는 다시 하락세

<표 8>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본원통화	-7.2	12.1	20.0	15.1	8.6	11.4	11.2	11.0	9.6	8.9	10.5	7.2	16.1	13.7
M2	19.0	27.9	30.2	25.9	20.4	18.1	16.3	16.0	13.9	13.2	12.8	12.8	14.4	13.4
MCT	7.5	7.7	14.4	13.1	10.2	9.5	8.7	9.5	8.6	8.7	9.0	9.3	11.1	11.2
MCT+ ¹⁾	7.4	5.3	15.1	15.5	12.6	11.7	11.1	11.2	11.3	11.9	12.4	12.6	13.9	13.3
M3	13.9	11.3	5.6	8.2	8.4	7.9	7.7	8.2	8.8	9.8	10.3	10.7	-	-

주 : 1)MCT+=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 가계대출 호조, 회사채 순상환

- 기업대출 증가는 월중 2조원 수준에 머무는데 그쳤으나 가계대출은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은행대출은 4/4분기 들어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표 9> 은행대출(신탁포함)추이¹⁾

단위 : 증감액, 억원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은행대출	126,390	213,133	162,125	73,031	37,808	57,436	59,482	72,158	86,330
대기업대출	36,044	29,672	29,394	-22,608	21,042	-7,967	-1,438	10,142	514
중소기업대출	27,526	68,105	47,156	19,206	11,711	20,462	22,414	12,832	19,462
가계대출	46,145	94,609	50,009	72,818	38,295	40,911	39,125	48,320	65,368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포함.
 자료 : 한국은행

- 금년 들어 Primary CBO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채무조정 관련 전환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발행이 순증기조를 이어왔으나 4/4분기 들어 순상환기조로 전환
- 이는 우량기업들이 그동안 확보한 자금으로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한데 따른 것임.
- 기업의 저금리 자금조달원 중 하나인 CP발행은 투신사 수신감소에 따른 매입수요 위축으로 11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

<표 10>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억원

	2000년	2001년				
	12월	1/4	2/4	3/4	10월	11월
회사채발행(순) ¹⁾	-51,674 (-)	53,162 (18,203)	59,547 (22,004)	29,531 (22,004)	-23,433 (-24,113)	-17,066 (-23,126)
CP발행(순) ²⁾	-52,947	63,816	1,890	33,569	12,919	-12,997
주식 발행 ³⁾	11,492	4,478	8,924	10,829	4,364	1,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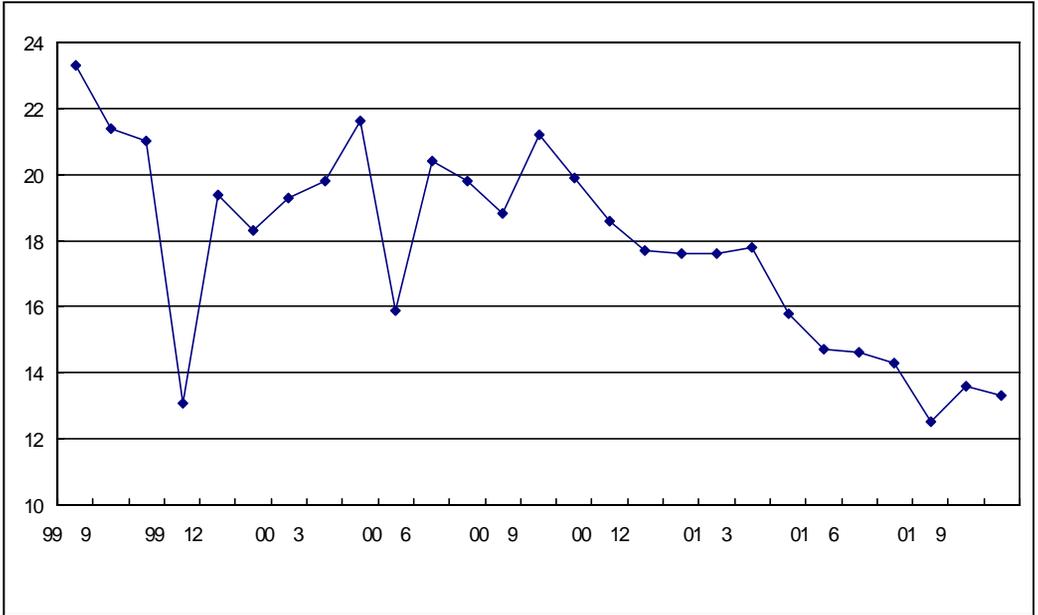
주 : 1)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내는 Primary CBO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채무조정 관련 전환사채 제외

2)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및 채무재조정기업 출자 전환분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이 4/4분기 들어 13%를 유지하고 있는 바,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3> 당좌대출한도 소진율 추이



주 : 시중은행 기준, 12월은 25일기준
 자료 : 한국은행

- 9월중 0.11%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전국어음부도율은 10월중에는 대우계열사 등 既부도기업의 부도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월평균 수준인 0.23%로 상승
- 부도업체수는 꾸준히 감소해 9월중 373개까지 하락하였으나 10월에는 414개로 월평균 수준에 근접
-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이 9월중 18.3배에서 10월에는 17.6배로 하락

<표 11>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19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1/4	2/4	7월	8월	9월	10월
어음부도율(전국)	0.33	0.26	0.33	0.23	0.24	0.25	0.11	0.23
서울	0.34	0.26	0.34	0.24	0.24	0.25	0.10	0.23
부도업체수(전국)	6,718	6,693	1,525	1,335	378	396	373	414
서울	2,559	2,555	580	486	128	156	157	145
신설법인/부도법인 ¹⁾	12.4	14.9	14.9	17.1	21.8	17.9	18.3	17.6

주 : 1)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지속

- 4/4분기 들어서도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미테러사건으로 자산안전성 선호현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하던 투신사 수탁고가 10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음.
- 은행수신은 10월중 2.5조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

<표 12>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2000년	2001년						
	연중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말잔액
은행계정	917,213	79,330	46,130	74,662	136,455	-25,125	64,217	4,692,724
실세요구불	40,950	39,977	-24,098	6,363	44,636	-9,956	-6,606	313,284
저축성예금	767,872	22,840	52,502	57,548	92,007	-11,054	68,942	3,947,959
(정기예금)	559,601	-2,126	33,943	19,378	22,338	-579	13,327	2,094,046
(수시입출식)	152,756	12,929	1,949	28,286	61,672	-5,475	64,450	1,225,144
<MMDA>	33,270	-1,885	-1,163	17,598	9,501	-5,115	44,049	447,449
CD+RP+표지어음	108,392	16,513	17,726	10,751	-188	-4,115	1,881	431,481
금전신탁	-421,623	-3,637	-2,440	-2,619	824	8,416	-4,769	763,883
추가금전	47,143	-6,549	-1,353	544	3,284	3,825	-1,854	58,854
단위금전	-119,410	-1,360	156	3,884	-344	1,454	647	25,753
신종적립	-110,451	-4,086	-3,873	-3,382	-2,729	-4,504	-3,369	107,240
특정금전	49,604	4,219	4,917	-2,991	3,714	10,084	1,745	193,880
기타	104,549	2,626	-3,721	-3,856	-5,105	-8,369	-6,799	284,085
투신사	-501,694	9,612	132,650	53,517	74,762	-12,068	-83,574	1,587,842
단기채권투자신탁	-231,293	10,959	33,018	19,962	24,470	2,870	-10,421	282,813
장기채권투자신탁	-261,213	-1,167	13,180	2,679	1,725	-6,833	-23,162	420,922
MMF	42,582	-15,527	72,115	11,366	43,680	-12,366	-38,403	400,173
주식투자신탁	-51,770 ¹⁾	2,224	623	-87	4,823	2,962	2,522	59,690
혼합투자신탁	-	13,123	13,714	19,597	64	1,299	-14,110	424,244
종금사	-76,032	-10,235	5,524	-1,856	-3,228	340	6,480	105,082
채신예금	75,819	5,988	577	-2,177	7,379	2,087	2,788	293,679
증권사고객예탁금	-9,343	-12,765	-1,066	-309	6,530	-587	17,319	99,397
주식형뮤추얼펀드	-36,863	2,182	2,652	5,848	4,930	7,121	3,092	51,826

주 1) 혼합투자신탁포함.

자료 : 한국은행

- 미테러사건 직후 급락세를 보였던 주가는 미국증시 회복,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국내경기 바닥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임.

· 12월 11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68.77로 미테러사건 이후 단기저점대비 40%이상 상승

<표 13> 주가 추이

	2000년	2001년								
	12월	1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종합주가지수	504.62	617.91	523.22	595.13	541.55	545.11	479.68	537.81	643.89	
코스닥지수	52.58	84.36	68.43	76.87	68.09	61.84	51.64	62.55	70.52	
다우존스지수	10,787	10,887	9,879	10,502	10,523	9,950	8,848	9,075	9,852	
나스닥지수	2,471	2,773	1,840	2,162	2,027	1,805	1,499	1,690	1,931	

주 :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시장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들어 일평균 800억원 이상 순매수하는 대규모 매수세를 보임.

<표 14>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기간중 일평균, 억원

	2000년	200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식순매수	545	496	359	833	652	459	-290	-237	167	-230	848	877
거래소	478	273	369	18	567	458	-298	-214	139	-250	711	739
코스닥	67	223	-10	20	85	1	8	-23	28	20	137	138

- 주식시장 급상승세에 힘입어 고객예탁금이 9조 9,397억원에 달하였으며 신용융자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15>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1999년	2000년	2001년						
			1/4	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유 상 증 자	173,858	41,939	6,423	1,946	659	762	2,308	2,487	732
기 업 공 개	153,576	11,269	-	-	402	-	-	-	-
계	327,434	53,208	6,423	1,946	1,061	847	2,308	2,487	732
고객예탁금잔액	69,919	60,576	76,444	77,510	76,444	76,135	82,205	82,078	99,397
신용융자잔고	6,828	1,352	1,511	1,749	1,663	1,530	1,209	1,306	1,589

주 : 고객예탁금잔액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 미테러사건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지연 전망 및 콜금리 목표 인하 등으로 9월중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
- 그러나 10월중 콜금리 목표 동결 등의 영향으로 추가금리 하락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11월 들어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채권금리는 주가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

<표 16>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리(%)

	99년	2000년	2001년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콜(익일)(A)	4.71	6.01	4.94	5.01	5.00	4.03	4.76	4.51	3.89	4.01	3.96
CP(91일)	7.47	7.26	6.06	6.19	5.98	5.69	5.30	4.96	4.67	4.59	4.97
국고채(3년)(B)	9.22	6.70	6.31	6.80	6.17	5.93	5.58	5.15	4.45	4.98	5.68
회사채(3년)(C)	9.85	8.13	7.69	8.05	7.37	7.10	6.89	6.55	5.95	6.59	6.99
B - A(%p)	4.51	0.69	1.37	1.18	1.17	1.90	0.82	0.59	0.56	0.97	1.72
C - A(%p)	5.14	2.12	2.75	3.04	2.37	3.07	2.13	2.01	2.06	2.58	3.03

주 : 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환율 및 외채 현황

- 원·달러환율은 미테러사건 이후 불안심리를 반영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
- 미테러사건 직후의 원·달러환율은 상승세는 미국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수상황이 반영된 것임.
- 특히 미테러사태 이후 원화는 엔저에는 민감하게 엔고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양상
- 최근 들어 원·달러환율의 하락세는 외국인 주식순매수 지속에 따른 달러물량 부담으로 12월 10일 현재 1,280원을 기록

<표 17>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99년	2000년	2001년						
	12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원/달러 ¹⁾	1,138.00	1,264.50	1,327.50	1,297.5	1,300.00	1,278.00	1,306.9	1,296.1	1,273.0
	(+5.8)	(-10.0)	(-4.7)	(-1.1)	(-0.1)	(+1.7)	(-2.2)	(+0.8)	(+1.8)
엔/달러 ²⁾	102.23	1,14.41	126.18	124.72	125.09	118.86	119.42	122.46	123.46
	(+11.0)	(-10.6)	(-7.5)	(-4.4)	(-0.3)	(+5.2)	(-0.4)	(-2.4)	(-0.8)
원/100엔 ³⁾	1,111.17	1,101.78	1,057.07	1,043.51	1,039.46	1,075.20	1,091.0	1,061.3	1,028.0
	(-4.6)	(+0.9)	(+4.2)	(+2.9)	(+0.4)	(-3.3)	(-1.4)	(+2.7)	(+3.2)

-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종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월말대비 절상(+), 절하(-)율(%)

- 총대외채권은 2001년 9월말 현재 1,634억 달러이며 순채권 규모는 384억 달러로 지난 6월 대비 36억 달러 증가
- 총대외지불부담규모는 1,250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표 18> 총대외지불부담과 채권 동향

단위 : 억 달러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말	연말	연말	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총대외지불부담	1,487	1,371	1,363	1,298	1,270	1,254	1,262	1,250
장기외채	1,180	978	921	875	859	863	867	852
단기외채	307	392	442	424	411	391	396	399
(비중)	(20.6)	(28.6)	(32.4)	(32.7)	(32.4)	(31.2)	(31.4)	(31.9)
총대외채권	1,285	1,454	1,669	1,619	1,618	1,636	1,646	1,634
순채권	-202	83	306	321	348	382	383	384

자료 : 재정경제부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세계경제 : 침체 지속, 내년 하반기 회복 전망

- 2001년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아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과 아세안 신흥 경제권이 동반 침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양상

<표 19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대비(%)

	2000년	2001년			2002년		
		IMF	OECD	DRI-WEFA	IMF	OECD	DRI-WEFA
전 세계	4.7	2.6	-	1.3	3.5	-	1.7
선진국	3.8	1.3	1.0	0.9	2.1	1.0	1.2
(미국)	4.1	1.3	1.1	1.0	2.2	0.7	1.3
(일본)	1.5	▽0.5	▽0.7	▽1.2	0.2	▽1.0	▽0.9
(EU)	3.4	1.8	1.7	1.4	2.2	1.5	1.8
세계교역량	12.4	2.7	0.3	1.1	5.2	2.0	2.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1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1
 DRI-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tr. 2001

-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전망
-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테러와의 전쟁도 종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미국경제 : 혼조 속 회복 기대 확산

- 2001년 3/4분기 미국경제는 소비의 급격한 둔화, 투자 및 수출의 부진 지속 등으로 93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1%)
-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증가율이 전분기 2.5%에서 1.1%로 둔화

- 미국경제는 4/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될 정도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지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모습
- 11월 들어 미국경제는 산업생산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
- 그러나 테러사태 이후 급감하였던 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액이 10월 들어 큰 폭의 증가로 돌아서며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

<표 20>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GDP 성장률	4.1	1.3	0.3	-1.1	-	-	-	-	-	-
민간소비	4.8	3.0	2.5	1.1	-	-	-	-	-	-
민간투자	6.8	-12.3	-12.1	-10.7	-	-	-	-	-	-
소비자물가	3.4	1.0	0.8	0.2	0.2	-0.3	0.1	0.4	-0.3	-
수출	11.3	-0.4	-3.2	-5.8	-1.9	-12.7	1.1	-8.5	-	-
수입	18.2	-1.7	-4.1	-8.3	-0.7	-1.9	-1.0	-14.0	-	-
산업생산지수	5.6	-1.7	-1.1	-1.4	-1.0	-0.1	-0.4	-1.0	-1.1	-
하이테크산업	53.6	-1.6	-5.7	-5.1	-2.5	-1.9	-0.7	-1.7	-0.7	-
제조업가동률	81.3	77.9	76.4	74.9	75.6	75.6	75.0	74.1	73.1	-
개인소비지출	7.7	1.5	1.0	0.1	0.4	0.3	0.2	-1.7	2.9	-
구매자관리지수	51.6	42.1	43.3	46.2	44.7	43.6	47.9	47	39.8	44.5
소비자신뢰지수*	139.0	113.9	115.0	109.1	118.9	116.3	114.0	97.0	85.3	82.2
실업률	4.0	4.2	4.5	4.8	4.5	4.5	4.9	4.9	5.4	5.7

주 : *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 FRB, 노동부, 상무성

- 2002년 미국경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 최근 미국경제는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소비심리지수가 되살아 나는 징후를 보 이면서 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음.
 - 미경제조사국(NBER)도 미국경제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침체국면에 접어 들었음 을 확인함으로써 과거 경기침체가 평균 11개월간 지속되었다는 분석에 근거할 때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를 뒷받침
 -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업률 급등, 테러전 확산 등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잠복 할 전망

일본경제 : 장기불황 지속 전망

- 일본경제는 3/4분기중 실질 GDP가 0.5%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10월에도 생산 및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침체 지속

<표 2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GDP 성장률	2.4	1.0	-1.2	-0.5	-	-	-	-	-
민간 소비	0.6	1.9	-1.1	-1.7	-	-	-	-	-
민간 투자	8.6	-3.0	0.9	1.1	-	-	-	-	-
소비자 물가	-0.6	0.3	-0.6	-0.2	-0.1	-0.1	0.1	-0.2	-0.2
수출	7.2	-4.8	-3.6	-1.9	8.4	-2.5	-4.6	8.1	-2.2
수입	16.4	-2.1	-2.4	-4.9	-3.3	-2.7	-11.4	0.0	15.7
산업생산지수	5.9	-1.1	-5.8	-11.1	-0.8	-3.0	0.8	-2.9	-0.3
민간기계수주	19.0	-7.0	1.1	-5.7	-6.6	-1.6	8.7	-13.2	-10.1
도소매판매	-0.1	-2.1	-7.2	2.3	5.9	-1.0	-5.5	13.2	-9.8
실업률	4.7	4.9	5.1	5.1	5.0	4.9	5.0	5.3	5.4

자료 : 통상산업부, 총무부, 경제기획청

■ 일본경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최근 일본 정부는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당초 1.7%에서 -0.9%로 하향 수정
- 일본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경제는 향후 1~2년간 침체가 지속될 전망

* 고이즈미 내각은 2001~2003년간을 일본경제의 “집중 조정기간”으로 설정하여 동 기간중 0~1%의 저성장을 감수하면서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

유로경제 : 내년 하반기 완만한 회복 예상

- 유로경제는 3/4분기 들어 투자 및 수출이 모두 부진하여 성장률이 전기대비 0.1%로 둔화(전년동기대비 1.3%). 10월에도 유로경제는 경기체감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하락하는 등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양상
- 유로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과 금리 인하 및 소득세 경감 효과가 가시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예상되나 본격적인 회복은 2003년에 가능할 전망

<표 22> 유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G D P 성 장 률	3.4	0.5	0.1	0.1	-	-	-	-	-
민 간 소 비	2.5	0.8	0.5	0.2	-	-	-	-	-
민 간 투 자	4.4	-0.3	-0.5	-0.3	-	-	-	-	-
소 비 자 물 가	2.3	0.6	1.3	0.2	0.1	-0.1	0.0	0.3	-0.1
수 출	21.3	-7.5	2.7	-2.7	0.8	0.1	-10.9	4.4	-
수 입	28.4	-6.5	-1.0	-6.5	-1.8	-3.7	-7.8	6.3	-
산 업 생 산 지 수	5.5	0.5	-0.8	-0.3	1.0	-1.7	1.5	-0.5	-
제 조 업 가 동 률	83.8	84.4	83.6	83.0	-	-	-	-	-
경 기 체 감 지 수	103.8	103.0	101.6	100.3	101.1	100.7	100.1	100.1	99.1
소 비 자 신 뢰 지 수	1.0	1.0	-2.0	-8.0	-5	-7	-8	-5	-8
소 매 판 매	2.3	0.7	0.1	0.6	0.0	0.4	0.2	0.3	-
실 업 률	8.9	8.4	8.4	8.4	8.4	8.4	8.3	8.4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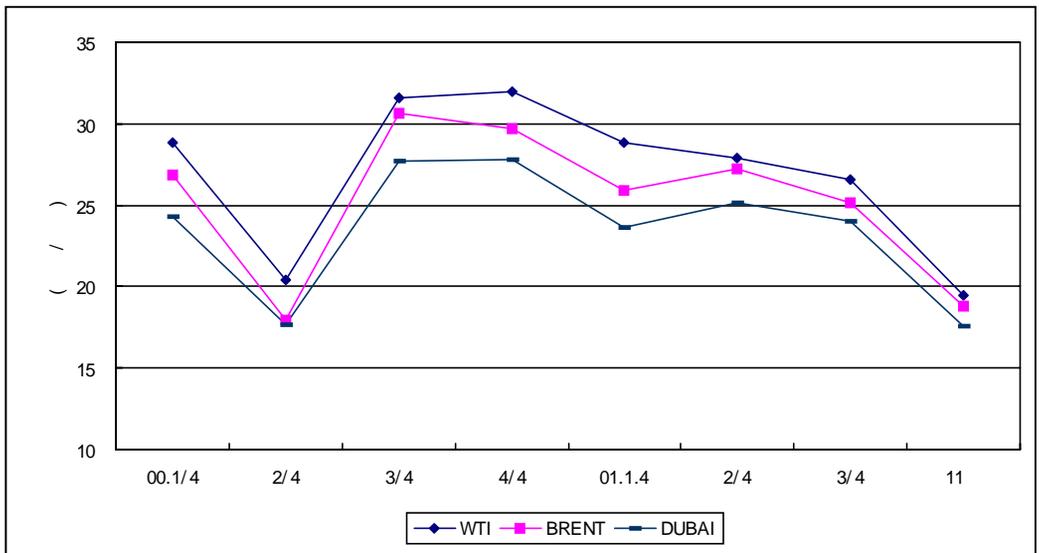
자료 : Eurostat, ECB

2.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 20달러선에서 하향 안정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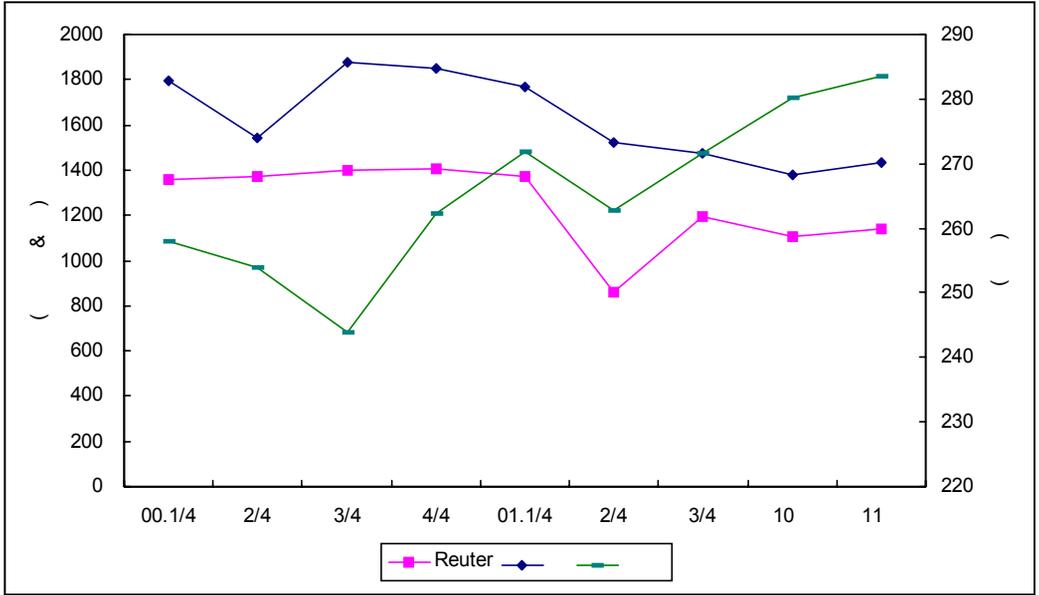
- 국제유가는 감산에 대한 산유국간 합의 실패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 평균 배럴당 20달러를 하회
- 국제유가는 테러전이 이라크 등으로 확산될 경우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20달러 내에서 안정될 전망

<그림 4> 국제유가 추이(기간평균)



- 기타 원자재 가격은 11월 들어 동 생산업체의 감산 움직임, 곡물 주산지의 기상 악화 등으로 소폭 반등

<그림 5>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지수, 동(달러/톤), 소맥(센트/부셸))



3. 국제금리 · 환율

장단기 금리 하락, 달러 강세

■ 세계경제 침체와 잇따른 목표금리 인하로 장·단기 국제금리 모두 하락세

- FRB : 올 들어 11차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6.5% → 1.75%)
- 일본은행 : 올 들어 4차례 공정할인율 인하(0.50% → 0.10%)
- ECB : 올 들어 4차례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4.75% → 3.25%)

<표 23> 국제 단기금리 추이(3월물, 기간평균, %)

	2000년	2001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1
미국(Libor)	4.40	5.26	4.10	3.33	3.66	3.47	2.85	2.31	2.03	1.90
일본(Libor)	6.53	0.37	0.08	0.07	0.08	0.08	0.06	0.08	0.08	0.08
유로(Euribor)	0.28	4.75	4.55	4.27	4.47	4.35	3.98	3.60	3.39	3.35

자료 : ECB, FRB

<표 24> 국제 장기금리 추이(국채수익률, 10년만기, 기간평균)

	2000년	2001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미 국	6.03	5.05	5.27	4.98	5.24	4.97	4.73	4.57	4.70	
일 본	1.76	1.37	1.24	1.38	1.33	1.36	1.40	1.36	1.33	
유 로	5.44	4.99	5.19	5.12	5.25	5.06	5.04	4.82	4.67	

자료 : ECB, FRB

■ 달러화 강세 엔화·유로화 약세

·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일본 및 유로 경제 전망 불투명

<표 25> 엔화 및 유로화 환율 추이(기말기준)

	2000년	2001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엔/달러	114.4	125.5	124.7	119.2	125.0	118.8	119.2	122.5	123.2	
달러/유로	0.94	0.88	0.85	0.91	0.88	0.91	0.91	0.90	0.90	

자료 : 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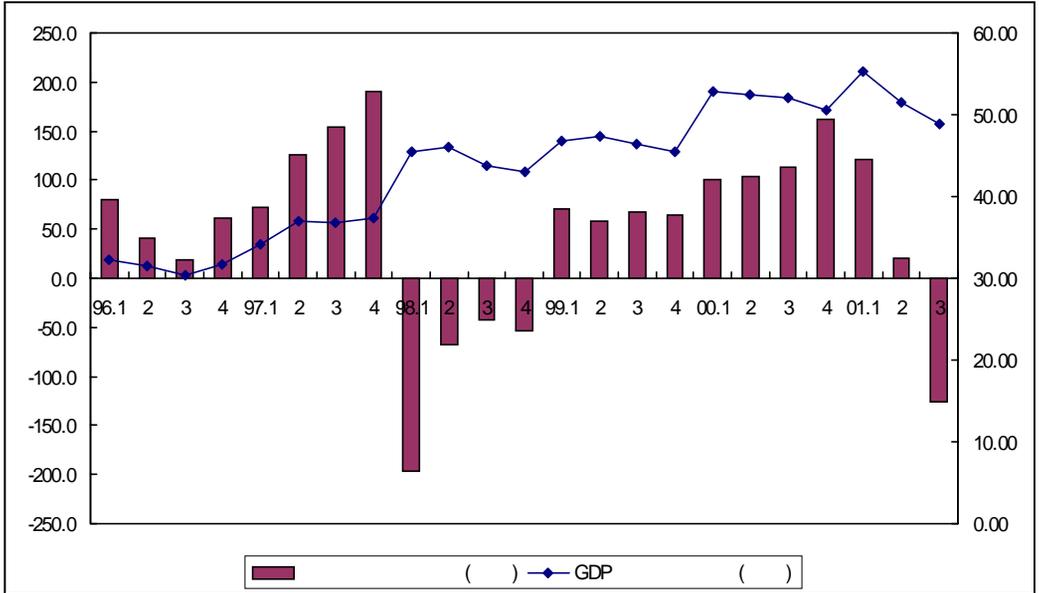
제 3 장

2002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 우리의 주요수출시장인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테러사태와 아프리카전쟁으로 인한 큰 폭의 수출감소세가 현 경기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우리 경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의존도가 96년 35%에서 2000년에는 50% 이상 크게 높아졌음.
- 그러나 지난 해 4/4분기이후 시작된 수출둔화가 올 3월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3/4분기 중에는 감소폭이 20% 가까이 확대. 이에 따라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3/4분기에는 큰 폭의 감소세

<그림 6> GDP대비 수출비중과 수출기여율 추이



· 4/4분기에 들어와서도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올 4/4분기에도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지난 해 같은 기간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 및 재정 지출 효과에 힘입어 3/4분기보다는 높은 2.5%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연간 성장률은 지난 해(8.8%)의 1/3수준인 2.6%에 그칠 전망

- 따라서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의 가시적인 회복시점과 속도는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수출의 회복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회복과 직결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기전망에 관련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함. 첫 번째는 올 2/4분기에 시작된 미국의 불경기가 3분기 정도 지속된 뒤 내년 1/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부터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와 두 번째는 불경기 기간이 3분기 이

상 장기화되어 회복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고 회복세도 미약할 경우

- 최근 미국경제의 움직임은 미국경제가 내년 하반기이후 가시적인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더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프칸전쟁의 조기종결 가능성, 반도체가격 반등 조짐과 IT산업에서의 과잉설비 해소 조짐, 유가하락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 미시간 소비심리지수, 내구재 주문, 주택경기 양호 등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주식시장은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여 급등세를 보이는 등 경기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 3%의 저성장 기조에 머무를 전망이다. 하반기이후에는 수출 및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2년 연간으로는 3.6%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저금리 기조와 가계신용 확대에 따른 차입여건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월드컵 특수,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4.0%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아프칸전쟁,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영환경 불투명성 등으로 상당기간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올해 두자리수의 감소세에서 내년에는 1%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월드컵 특수 및 두 차례의 선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중심으로 연간 4%의 증가율이 예상

2. 경상수지

- 수출은 세계경제의 침체국면 지속과 미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이 이어질 전망
 - 세계경제는 70년대초 1차 석유파동 이후 25년만에 미국, 일본, 유럽의 동시불황 직면
 - 미국경제의 회복이 시작되어도 교역량 증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 하반기중에는 미국경제 회복과 동조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그러나 상반기 마이너스 증가율의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는 1%내외에 그칠 전망
 - 최근 반도체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어 향후 우리 반도체 분야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수입은 내년 중에도 점진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원자재 및 자본재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출보다 더욱 빠른 증가세가 예상되어 연간 4%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에 따라 내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축소될 전망이나 흑자기조는 유지될 전망
 - 지난해 각각 114억 달러와 169억 달러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금년 96억 달러와 152억 달러로 그리고 내년에는 54억 달러와 111억 달러로 점차 축소될 전망

<표 26> 2002년 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8.8	2.5	2.6	2.8	3.2	3.8	4.6	3.6
(제조업)	15.3	1.8	1.6	2.5	3.5	4.3	6.3	4.2
총소비	6.2	4.2	2.6	3.6	3.5	3.4	3.6	3.5
민간소비	7.1	4.6	3.0	3.8	3.7	3.8	4.2	3.9
고정자본형성	11.0	-3.5	-3.7	-1.7	1.3	4.7	5.9	2.7
설비투자	34.1	-14.3	-12.0	-7.4	-2.7	6.1	9.0	0.8
건설투자	-4.0	4.1	3.8	4.7	4.5	3.8	4.0	4.2
총수출	21.5	-3.6	0.1	-1.2	0.4	4.6	4.9	2.2
총수입	19.9	-4.2	-4.5	-1.6	3.3	6.1	10.0	4.5
생산자 물가	2.0	1.0	2.2	0.9	0.8	1.3	1.8	1.2
소비자 물가	2.2	3.3	4.3	2.9	2.6	3.0	3.5	3.0
경상수지	114.0	18.6	95.6	21.8	13.9	9.9	8.1	53.6
상품수지	168.7	36.4	151.9	31.6	26.1	27.6	25.9	111.0
수출(국제수지 기준)	1,759.5	371.7	1,528.1	374.5	380.5	389.0	399.5	1,543.6
증가율(%)	21.2	-17.2	-13.1	-7.9	-1.7	7.2	7.5	1.0
수입(국제수지 기준)	1,590.8	335.3	1,376.2	343.0	354.5	361.5	373.7	1,432.6
증가율(%)	36.2	-17.4	-13.5	-7.8	5.5	8.6	11.5	4.1
서비스+소득+이전수지	-54.7	-17.8	-56.2	-9.8	-12.2	-17.7	-17.8	-57.4
원화 환율(기말, 원/달러)	1,259.7	1,265.0	1,265.0	1,256.0	1,247.0	1,238.0	1,230.0	1,230.0
회사채수익률(평균, 연%)	9.4	7.2	7.2	7.4	7.6	7.9	8.1	7.8
세계교역량	12.4		1.1					2.5

3. 물 가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데다 환율, 원자재가격 등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요인들이 안정되고 상반기중 물가상승의 주요인이었던 공공요금인상도 정부의 노력으로 억제되면서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3/4분기중 4%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중에는 3%대로 더욱 낮아지면서 연간 전체로는 4.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중에도 우리 경제가 3%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 특히 9.11 사태 여파로 우려되었던 유가는 지금까지 사태진전을 비추어 보면 급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물가상승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중에는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에 대한 유인이 상존함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보일 전망

4. 금융부문

장단기 금리 : 2002년 점진적 상승 전망

- 회사채 순증규모는 상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2002년중 연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

- 그러나 기업들이 차입경영을 자제하고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자금수요는 2002년에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 대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계획을 유지할 전망이다.
- 2002년중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50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만기도래물량이 상반기중 집중되어 있어 일부 기업들의 경우 차환 및 상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2002년 1/4분기중 만기도래하는 2001년도 회사채신속인수 소화분의 해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자금시장내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별 자금사정 양극화 현상은 2002년도에도 지속될 전망

<표 27> 회사채발행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4/4	합계
총발행	30.7	58.7	66.0	18.0	19.0	15.0	9.0	61.0
상 환	33.7	44.7	57.3	17.0	14.0	9.5	10.2	50.7
순발행	-3.0	14.0	8.7	1.0	5.0	5.5	-1.2	10.3

- 정부의 저금리정책은 어느정도 유지되겠으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장·단기물 간의 기간별 수익률 격차는 확대될 전망

-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은 크지 않으며 한은의 신축적 유동성 관리로 급등할 가능성은 적으나 2002년 전반적으로 점진적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표 28> 2002년중 장기금리 전망

단위 : %

	2001년					200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회사채	7.2	7.6	6.6	7.2	7.2	7.4	7.6	7.9	8.1	7.8

- 주 : 1) 기간 평균기준임.
 2) 전망은 한경연 거시경제모형의 추정결과임.

원 · 달러환율 : 내년에도 소폭의 원화강세 추세 유지전망

- 수출부진 등 미달러화 자산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환예탁금 상황이 지속되면서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017억 달러를 기록
-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

<표 29>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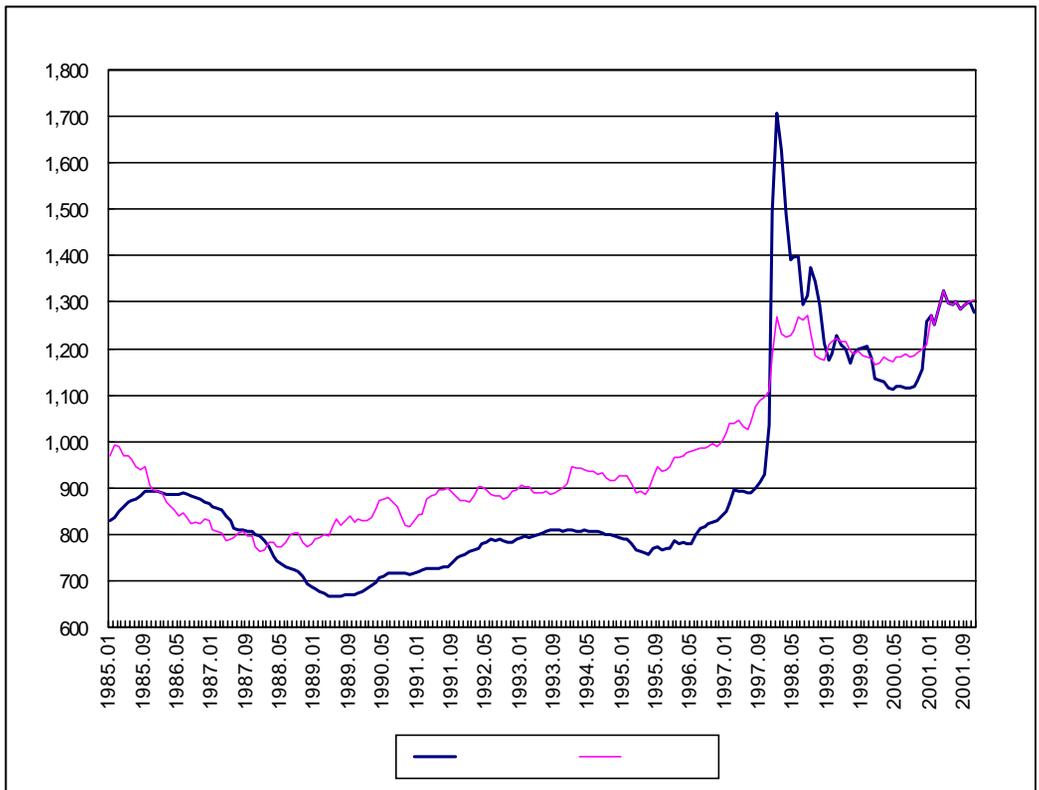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월말기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2월	12월	1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외환보유고	520.4	740.5	962.0	944.4	942.6	970.6	990.2	1,000.8	1,004.7	1,016.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63.3	53.0	45.9	44.9	43.6	40.2	40.0	39.9	-	-

자료 : 한국은행

- 작년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던 실질실효환율 차원의 원화의 적정환율(한국경제연구원 추정모형에 의한)은 금년 하반기이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작년 12월 이후 실제환율이 실질실효환율 기준(1985년 경제기준) 적정환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금년 8월 이후 거의 근접하는 추세가 지속

<그림 7> 실제환율과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 2002년 중 원·달러환율은 외환시장내의 불안심리와 엔화약세 기조가 변수이며 달러공급요인이 수요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이 부진하나 외환보유액과 거주자외화 예금잔액이 풍부한 상태이고 하반기 예정된 외자 유치 자금규모도 70~80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반적인 외환시장 수급상황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
- 원·달러환율은 엔화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상하방 경직성을 가지며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점진적 하향안정추세를 보여 연말에는 1,230원 정도에 머물 예상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현 거시경제정책 평가

- 2001년 내내 정책당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주창하였으나 실제정책의 집행에 있어 미진했음.
- 재정정책당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재정정책이 긴축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당국은 금년 상반기 중 예산 조기 집행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금년 1~9월의 통합재정수지의 중앙정부 세입세출도 1.7조원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통화당국은 미래 물가추세보다 과거 물가추세에 얽매어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하여 왔음. 負의 output gap (즉, 실제 GDP와 잠재 GDP와의 차이)가 계속 존함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미온적이어서 총수요 진작에 대한 기여가 크지 못했음.

2. 향후 정책방향

가. 내년초 경기상황에 따른 상이한 정책대응 요망

-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함.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침체국면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어야 함. 현시점에서 볼 때 미국경제는 상반기중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미국경제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수출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부진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면 향후 미국경제 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전이 되더라도 이를 기회로 활용할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내수를 통해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 것이 내년도 정책운영의 초점이 되어야 함.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負의 output gap이 나타나고 있는 한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음. 특히 내년중 물가상승압력이 낮을 전망임에 따라 금리인하가 총수요 급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확률은 크지 않음.
-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에 집행되는 추경의 효과가 내년초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도 예산의 명실상부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올해와 같은 재정정책의 난맥상(재정팽창기조라는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세입 세출 총괄 등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

여 재정정책의 시의적절한 거시경제조절 역할을 수행치 못함)이 계속된다면 확실한 재정기조를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감세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함.

- 그러나 내년 초에 미국경제가 예상외의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 우리의 거시정책은 안정기조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는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 빠른 회복을 시사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경우 우리의 수출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이는 국내투자 및 생산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더구나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내년에 있을 선거 및 월드컵 경기 등 내수증가 요인과 연결될 경우 자칫 총수요가 과열되는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
-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중 명실상부한 예산집행외에는 감세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을 전망. 하지만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에 대한 손질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인 만큼 현수준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물가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총수요 급등조짐이 뚜렷해 질 경우 금리의 상향조정을 고려하여야 함.

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노력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지속

- 기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과 규제철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이해관계자나 시장에 의한 규율로 전환해야 함.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으로부터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수행해야 함.

- 획일적인 부채비율이나 사외이사비율,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는 출자총액 규제, 유효성이 적은 현행 정리해고제, M&A나 해외매각에서의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 등의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또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책임 강화 등과 같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함.

<특집>

2001년도 주요분야별 경제정책 결산

I. 대기업부문	51
1. 2001년의 쟁점사항	51
2. 진척된 사항 내지 내용	52
3. 남은 과제	55
II. 공정거래부문	56
1. 2001년의 쟁점 사항	56
2. 진척된 사항	57
3. 향후 공정거래제도의 개선 방향	58
III. 금융정책부문	61
1. 현 금융정책의 문제점	61
2. 금융정책관련 정책제언	64
IV. 노동부문	67
1. 주5일 근무제	67
2. 정리해고	68
3. 노사관계	69
V. 거시정책 부문	71
1. 2001년 거시경제정책 쟁점사항	71
2. 향후 거시경제정책 과제	73

I. 대기업부문

1. 2001년의 쟁점사항

가. 기업지배구조 부문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및 집중투표제

-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소수주주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1998년에 두 차례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표소송제기요건을 이전의 1%에서 0.01%(의결권 발행주식 기준)로 대폭 낮추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그동안의 괄목할 만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서 이들 제도의 채택여부,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정부·재계·학계·시민단체간의 이견이 표출되는 등 2001년의 대표적인 정책적 쟁점사안이었음.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역차별적 규제임을 들어 1998년 2월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부채비율 200% 이하로의 획기적 감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자, 2001년 4월부터 출자총액을 순

자산의 25%로 제한하는 규제를 다시 시행함.

- 이에 따라 2001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율은 32.9%에다가 해소대상 출자초과분이 14조원에 이르는 등 출자 재규제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함께 동 제도의 실효성과 논리적 근거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규제수위의 조절이 불가피해짐.

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및 원용규제

- 동 제도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 하에 1986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으나 21세기의 전혀 다른 경쟁환경에서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순기능보다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되면서 이 제도의 존폐여부와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
- 참고로 30대재벌은 이 제도하에 공정거래법에서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7개 사안에 대해 규제를 받는 한편, 약 30여 개의 다른 법률에서도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음.

2. 진척된 사항 및 내용

가.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 금년에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3인 이상이면서 이사총수의 1/2 이상, 감사위원회(사외이사 2/3 이상)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

사 1/2 이상)의 구성을 의무화하였음.

- 집중투표제 : 시행요건을 완화하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함.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외국인지분의 확대에 따른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나.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제도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법적·제도적 인프라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2001년 11월 17일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임.
- 법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며, 소송대상행위는 기업의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이며, 시행시기는 2002년 4월 1일부터임.

다. 출자총액제한제도

- 금년 5월초, 本院의 정책보고서 『출자총액 제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간 이후 출자규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자, 정부는 규제적용배제와 예외항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바 있음.

- 적용제외(신설) :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
- 예외인정(추가)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
-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2001년 11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을 기존의 자산순위 30대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17개)으로 조정하고 한도출자 초과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대신에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태임.

라.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

-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각각의 규제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기본틀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
-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지정, 목적이 다른 여러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출자총액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38개)으로 규제목적에 따라 적용범위를 차별화한다는 것임.

3. 향후 과제

가. 집단소송제도 : 도입여부, 시기, 방법에 대해 좀더 신중한 접근 필요

- 동 제도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이념에 철저한 제도로서 여러 측면에서 이 제도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 대안인가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시행시기가 2002년 4월이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음.
-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은 현행 법률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불법행위인데 다 아직까지는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에 opt-in 방식을 접목하는 것이 기업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루 배려하면서 기업규율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판단됨.

나. 출자에 대한 사전적 총량규제는 여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출자·투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 고유의 의사결정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며, 정부가 우려하는 비생산적인 지배목적의 투자는 채권자(주채무계열제도)와 주주(대규모출자의 공시의무)에 의해 규율이 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출자규제는 예외 및 적용배제조항을 통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지주회사 설립 요건의 대폭 완화

- 지주회사는 경제효율의 관점, 경영투명성·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失보다 得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임.

II. 공정거래부문

1. 2001년의 쟁점 사항

- 현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
 - 국내기업 역차별 : 개방된 시장에서 외국기업보다도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 낮은 예측가능성 : 총자산액수를 30대그룹 지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사전적으로 자신이 규제대상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 기업구조조정에 장애 : 합병, 분할, 분사, 인수, 합작법인의 설립 등에서 타회사 출자는 구조조정의 수단인데, 이러한 수단이 제한되어 구조조정을 적시에 시행하기 어려움.
 - 투자위축으로 경기침체 악화 : 경제력집중 억제에 따른 신규출자 위축으로 기업의 투자가 저조함.
- 경제계의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개편방안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은행법상의 주채무계열로 일원화
 - 출자총액, 채무보증과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도 금융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폐지

- 일시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일원화
- 규제대상은 자산총액기준으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유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사업부문 집중화를 위해서 당분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2. 진척된 사항

- 경제계와 전반적인 규제완화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1년 회기중 통과시킬 전망
-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 출자총액 규제의 완화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17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제한
 - 결합채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 제외
 - 제도시행일(2001. 4. 1)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한 기업의 해소시한(2002. 3월말)내 미 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

· 출자총액 규제의 적용제외 및 예외대상 확대

※ 적용 제외 :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의 출자, ②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③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④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

※ 예외인정 추가 : ①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②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③ 순자산 개념을 현행 “자본총액 - 계열사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 계열사출자분”으로 조정, ④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등이 구조조정 지원용으로 회사의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⑤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강화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38개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을 금지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고객자본을 이용한 계열확장 억제 및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효과 제고

3. 향후 공정거래제도의 개선 방향

■ 공정거래법의 목적 :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어야 함.

-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관련 규제의 배제 :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통하여 생산물시장에서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관련 규제는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규제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로 위임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배제
 - 기업의 크기, 경영전략, 사업영역에 따라 기업이 차별되지 않도록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 철폐
 -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 대하여 미치는 진정한 문제는 개별시장에서 독과점력의 부당한 행사
-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의 배제 : 구조조정 및 유치산업보호 그리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예외조항은 삭제
- 경쟁정책의 강화 및 과학화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부당한 행사를 막고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며 이를 규제하는 데에 역점
 - 수평적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경쟁제한적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선 수단을 도입하고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수단 강화
 -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현 공정거래법 개선

- 경쟁정책 집행환경의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한 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갖고 있는 고발권을 확대

Ⅲ. 금융정책부문

1. 현 금융정책의 문제점

가. 회사채시장의 기능마비

- 미국 테러사태와 보복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황이 심화되는 것과 맞물려 회사채시장의 마비가 더욱 심화된 상황임.
- 내년 1.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24조 5,000억원중 차환발행이 어려운 비우량 채권이 80%대에 이르러 기업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하여 단기고육책으로 중견그룹들까지 자산매각에 나서고 있음.
-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위축된 수출과 투자가 경기회복 기대를 짓누르고 있는 마당에 자금사정 악화와 유동성 확보 경쟁은 부실기업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축소지향 경영은 성장잠재력을 침식할 것이며 이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뿐 아니라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공급측면의 병목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나. 금융구조조정의 허와 실

- 현시점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최종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최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단기

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채권시장의 가격기능은 마비상태이며, 주식시장의 건전성 미흡으로 기업가치와 주식 가격간의 연계가 미흡함.
- 보증시장과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
- 2001년 들어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부실은행들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과 우량은행간의 합병 등으로 요약됨.
- 부실은행들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은 오히려 금융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간의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라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됨.
- 우량은행간의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라는 목적이 있으나 현재 국민·주택은행간의 합병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중복점포의 폐쇄나 인원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어 합병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
- 금융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경쟁과정을 충분히 거쳐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금년 들어 부분예금보험제도 도입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의 추진은 일부 있었으나 1인당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되었음.
-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채권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근

원이 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잠재부실규모는 여전히 큼.

-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은 향상되었으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음.

<표 1> 잠재 부실기업의 추이

단위 : %

연도	상장기업 ¹⁾				비상장기업 ¹⁾			
	기업수	이자보상 비율 ²⁾	부실기업 부채비중 ³⁾	부실기업 차입금비중 ³⁾	기업수	이자보상 비율 ²⁾	부실기업 부채비중 ³⁾	부실기업 차입금비중 ³⁾
1995	662	199.8	12.1	14.1	4,623	192	28.0	33.6
1996	654	161.3	20.0	21.6	7,220	184	29.5	34.1
1997	641	131.0	31.2	33.8	5,173	140	37.6	42.4
1998	600	107.5	32.1	39.1	5,328	156.4	43.1	47.6
1999	483	252.4	24.6	34.7	4,804	279.6	43.9	47.3
2000	561	262.5	28.6	31.0	5,058	284.8	41.5	43.4

주 : 1) 이자보상비율이 2,000%이상, -2,000% 이하의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2) 이자보상비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100의 평균임.

3)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을 잠재부실기업으로 가정

자료 : 남주하, '공적자금 투입규모의 적정성과 금융구조조정', 2001. 11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 부실채권이 일부 은행에 집중되어 있음.

다. 상시퇴출제도의 작동 미비

- 상시퇴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실채권에 대한 경영 책임을 채권은행단에게 묻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은행은 잠재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실기업을 살리는 일종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고 있음.
-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시에 성실하고도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잠재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금융정책관련 정책제언

가. 회사채시장 기능 정상화 노력

-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봉적 접근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존재함.
- 회사채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견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대출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유인책이 필요하며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서도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지원대책이 시급함.

- 보다 장기적 대비책으로 회사채를 비롯한 채권시장 육성이 필요
- 채권형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형성을 허용하여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만기/이표/외화의 국채를 발행하고 흡수된 유동성은 공적 자금투입, 주식/채권 및 외환시장개입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채시장을 활성화

나. 클린뱅크화 추진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제거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clean bank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야 함.
-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위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회생가능 기업을 위한 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이 지금처럼 이자감면이나 채무연장 등 단순히 채무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제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그 업종에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고 기업경영의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자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체된 CEO의 의견을 존중하여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다.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감독기능 강화

- 금융기관의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대손충당금 축적 기준에 대한 감독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

- 금융권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은행들이 잠재부실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고 있기 때문임.

라.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의 기능 재조정

-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
- 최근 들어 Vulture Fund, CRC, CRV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100여개가 넘고 있음.
- 그러나 그 기능이 주로 채무조정에 의한 자본이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업가치의 제고라는 원래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음.
-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의 기능이 단기적인 채무조정에 의한 자본이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함.

IV. 노동부문

1. 주5일 근무제

- 2000년 10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기본합의를 보았으나 이의 시행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의 격차로 양대 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탈퇴 재협의 등을 거듭해 가면서 노사정에서의 합의가 지연됨.
 - 정부는 이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 단독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함.
 - 이에 노사정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2일 노사정 위원회의 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 19일에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함.
- 노사정 위원회(공익위원)의 안을 살펴보면
 -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 금융보험과 공공부문(2002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순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 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 생리휴가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 3년간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 4시간분의 수당 할증률을 25%로 함.

- 향후 노동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冬鬪를 시행할 것임.
- 정부는 노사협상의 최종 합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노사정 논의를 종결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

2. 정리해고

- 1998년 2월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리해고제를 도입, 근로기준법 제31-1에 명시함.
-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이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함.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일임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느냐 아니면 정리해고냐의 수준으로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석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더욱이 노조와의 강제적인 성실 협의를 해야 하고 또한 일정 규모이상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해고가 어렵게 되어 있음.
- 또한 이미 울산의 화섬 노사분규, 대우자동차의 사태 그리고 민노총의 행태에서 보다시피 심지어 직무전환 배치 및 구조조정(여기에는 사업변경도 포함됨)에 따른 인원조정도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 기업측은 정리해고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제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제는 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행이 불가능하여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속적 해석의 여지마저 없어짐.

- 따라서 정리해고제가 이미 근기법에 명문화된 이상 이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예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긴박한’을 삭제) 개정하여 경영여건에 따른 인원 조정에 유연화를 제고해야 함.
- 근기법은 사실상 임금과 노동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이미 타 법(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모성보호법 및 직업훈련기본법)으로 제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조항(기숙사 제도)이 되었음. 실질적으로 근기법은 이미 형해화되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근기법을 폐지하고 가칭 ‘근로계약법’을 신설하여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임금 및 노동력 부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간의 자유롭게 계약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환경변화에 노동관리를 신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자 및 노동시장에 재 진입코자하는 자에게는 다양한 근로형태로 노동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실질적인 근로복지를 누리게 함.
- 이 경우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자 및 신규 진입자들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돕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3. 노사관계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그동안 기업차원에서의 대립적 노사관계로 일관되어 오다 DJ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노총이 법적 공식 상급노동단체로 인정되고 또한 노사정위원회 설립으로 기업단체(전경련 경총 및 대한상의 등)와의 국가 차원에서의 노사

관계로 발전되었음.

- 기업차원의 노사관계의 문제는 정치권 및 정부의 개입으로 no work-no pay 원칙을 무시하고 no work- yes pay라는 잘못된 인식을 노조에게 심어줌에 있음.
- 따라서 기업차원에서의 노사관계에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no work-no pay가 정착되게 하여야 함.
- 다만 정부는 불법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함.
- 상급단체의 노사관계의 문제는 민노총이 노총과 더불어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 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과정에 있음.
- 먼저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이를 실질적인 협의 기구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노조와 정치적 물밑 교섭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자 함으로써 노사정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상급 노조에게는 투쟁만 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음. 일례로 1997년 노동법개정 당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노조법 제24조 2항) 및 복수노조 허용(노조법 제 5조)은 5년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말 5년 만기가 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나 노조와 정치적 협상으로 이를 다시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 따라서 향후 정부가 노사정 위원회를 두고 노정간의 정치적 교섭의 여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측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 철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향후 노조와의 정치적 타협을 철회하고 상급노조가 노사정 위원회 기구를 통하지 않고 투쟁(을겨울 冬鬪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를 불법시 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함.

V. 거시정책부문

1. 2001년 거시경제정책 쟁점사항

가. 정책집행과 그 시점 문제

- 정책당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주창하였으나 실제정책의 집행에 있어 미진하였음.
-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급락에도 불구하고, 2001년 상반기 기동안 정책금리는 2월에 0.25%p 단 한차례만 인하했음.
-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통합재정수지 중 공공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재정수지(세입-세출)가 2001년 상반기 동안 5.4조원, 9월까지도 1.7조원 흑자를 시현했음. 따라서 2001년 재정정책은 긴축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지출을 주창했으나 예산의 배정과 집행의 불일치로 인해 재정지출은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었음.
- 재정특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3/4분기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재정기여율이 51.3%를 달했으나 상반기에는 10%대에 불과하였음.
- 또한 경기전망이 다소 낙관적인 현 시점에서 정부의 내년 재정지출 확대나 팽창예산 계획 등은 정책집행 시점을 놓친 감이 있음.

나.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

- 통화신용정책의 시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개방화 등으로 정책 유효성이 적어 보이나 2001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회복세로 경기급락이 완화되었음을 고려할 경우 금리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2001년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로 인해 저축률이 떨어지고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음. 또한 월세전환에 따라 주택수요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 1·2차 추정예산은 경기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기부양을 위한 규모나 항목이 부족하였음. 또한 증시관련 안정화대책이나 재정지출의 구성내역 등을 살펴볼 때 대증요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한편 재정지출 확대나 특별소비세 인하 등은 내수에만 주된 효과가 있음. 수출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인하는 3/4분기에 집중되었고 법인세의 인하는 추진되지 않았음.
- 따라서,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으로는 국내 경기부양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움.

다.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선택 문제

- 재정지출은 감세정책에 비해 총수요 증대를 빨리 유도하고 민간소비나 내수산업에만 효과가 있으나 감세정책은 재정지출에 비해 정책시차가 있고 내수 및 수출에 영향을 미침.

- 정부는 IMF 권고와 세입기반 잠식우려로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하락의 폭이나 속도에 따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거시경제정책 과제

-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해야 하되, 통화정책보다는 정책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향후 정책운용은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임하고 일시적 경제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대응해야 함.
 - SOC사업 등과 같이 용도가 분명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거시정책운용은 상대적으로 수출부문에 비해 내수진작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수출기업이 요망하는 경영환경을 미시적으로 개선해야 함.
- 미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된다면 거시정책은 안정기조로 전환해야 함.
 - 추가적인 재정지출이나 감세조치는 불필요함. 다만,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지출하되 예산의 배정과 집행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함.
 - 내년 물가상승압력이 적을 것이므로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되 단기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해야 함.

- 또한,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종료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고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제도 및 구조 개선이 필요함.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활력 제고와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수립이 요망됨.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이른바 골뚝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또한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연한 미시경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됨.
- 한편 내년에 지자체 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레임덕 현상이 예상되므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심성 정책을 배제해야 함.
- 예산배정 및 재정지출에 있어 그 용도와 필요성을 분명히 하여 일부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복지정책에 있어 일방의 입장이 아닌 노사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부 록

주요경제통계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US \$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998년	-6.7	-7.4	6,723	-11.7	-0.4	-21.2	-38.8	-10.1
1999년	10.9	21.0	8,551	11.0	1.3	3.7	36.3	-10.3
2000년	8.7	15.4	9,628	7.1	1.3	11.0	34.3	-4.1
1999년1/4	5.8	10.0	-	7.9	0.6	-4.6	11.6	-13.5
2/4	11.2	20.9	-	10.9	1.7	4.2	35.6	-8.8
3/4	13.0	26.2	-	12.4	1.1	6.7	47.0	-9.5
4/4	13.0	26.4	-	12.8	1.7	7.2	53.0	-9.9
2000년1/4	12.6	22.3	-	10.8	1.5	21.9	62.6	-6.8
2/4	9.7	16.9	-	8.9	1.1	13.2	41.6	-4.2
3/4	9.2	17.7	-	5.7	0.5	10.5	31.9	-3.5
4/4	4.6	6.5	-	3.2	1.8	1.6	8.1	-2.5
2001년1/4	3.7	4.4	-	0.9	-2.3	-3.7	-7.9	1.4
2/4	2.7	2.1	-	2.9	-0.7	-4.7	-10.8	0.9
3/4	1.8	-1.6	-	3.4	1.6	-2.9	-15.4	8.3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 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3.7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44.8	740.5	1,145.4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6.0	110.4	962.0	1,259.7
2000년 10월	152.5	13.4	141.0	24.2	13.7	10.2	927.0	1,136.7
11월	149.9	5.6	141.6	20.7	11.0	10.6	933.4	1,195.3
12월	149.8	0.1	141.8	4.7	17.0	12.4	962.0	1,259.7
2001년 1월	126.5	4.0	124.3	-1.3	3.6	5.6	954.2	1,265.5
2월	133.3	5.1	126.9	5.6	10.1	7.0	953.3	1,245.7
3월	141.3	-2.1	129.5	-8.9	20.8	18.1	944.4	1,328.0
4월	121.2	-10.3	112.2	-16.0	13.1	5.9	934.8	1,324.7
5월	133.1	-9.1	115.5	-13.1	20.4	21.0	936.3	1,292.9
6월	129.4	-15.1	117.3	-11.0	17.6	9.9	942.6	1,300.7
7월	114.1	-21.0	110.9	-18.9	8.6	4.4	970.6	1,301.4
8월	117.7	-20.4	113.6	-15.5	6.4	-2.0	990.2	1,283.8
9월	124.6	-17.6	117.1	-11.9	14.9	7.1	1,000.8	1,309.1
10월	121.8	-20.1	115.2	-18.3	7.4	3.4	1,004.7	1,296.1
11월	125.4	-16.3	115.8	-18.3	-	-	1,016.5	1,273.0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전망과 정책과제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 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13.9	14.99	406.1
1999년	-2.1(0.9)	0.8(1.4)	6.3	14.9	27.9	11.3	8.86	806.8
2000년	2.0(1.7)	2.3(3.2)	4.1	8.6	30.3	5.6	9.25	734.2
2000년 10월	1.8	2.8	3.4(3.9)	10.4	28.3	6.7	8.72	548.1
11월	1.3	2.6	3.6(4.1)	7.4	25.5	6.6	8.41	544.1
12월	1.7	3.2	4.1(4.0)	1.4	24.5	6.7	8.12	526.4
2001년 1월	2.3	4.2	4.6(4.1)	28.6	25.9	8.2	7.76	585.0
2월	2.4	4.2	5.0(4.2)	-4.6	20.4	8.4	6.79	593.6
3월	2.8	4.4	4.8(4.2)	8.6	18.1	7.9	7.16	543.9
4월	3.3	5.3	3.8(3.8)	5.4	16.3	7.7	7.91	530.3
5월	3.4	5.4	3.5(3.6)	3.2	16.0	8.2	7.70	600.7
6월	2.8	5.2	3.3(3.6)	5.9	13.9	8.8	7.24	602.9
7월	2.7	5.0	3.4(3.7)	4.7	13.2	9.8	7.00	554.1
8월	2.0	4.7	3.4(3.6)	-1.6	12.8	10.3	6.51	567.7
9월	1.2	3.2	3.0(3.3)	9.9	12.8	10.7	6.32	504.0
10월	0.6	3.6	3.1(3.5)	-	14.4	-	6.31	523.3
11월	0.1	3.4	-	-	13.4	-	6.79	604.9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축허가면적	
									전체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8년	-6.5	68.0	-12.7	-21.0	-31.0	-37.7	-42.6	-	-55.0	-50.3
1999년	24.2	76.5	13.0	21.1	30.9	43.5	0.8	1.2	42.3	43.2
2000년	16.8	78.3	9.8	6.4	11.7	30.1	15.1	-3.1	11.8	-7.4
2000년 10월	11.7	76.0	5.3	-0.2	-4.9	22.2	-16.8	-0.7	-7.5	-19.4
11월	6.5	75.2	4.0	1.0	15.2	-1.1	-7.5	-2.9	-23.1	-42.9
12월	4.7	73.9	2.3	-6.2	41.7	-2.2	0.7	-0.1	-56.7	-64.8
2001년 1월	0.1	73.9	2.2	-10.8	-14.5	-9.2	-32.1	-0.6	2.7	-8.1
2월	8.8	74.9	1.6	-4.8	2.8	-4.8	-14.6	5.7	-4.8	-32.7
3월	6.4	75.2	3.6	-8.3	19.9	-5.0	-27.2	0.2	-29.5	-33.0
4월	5.6	74.7	4.0	-1.1	-11.8	-5.8	0.0	3.6	-17.6	-19.3
5월	2.3	74.8	4.8	3.3	3.2	-5.3	16.0	1.2	56.0	72.2
6월	-2.8	74.1	4.5	13.7	0.7	-2.8	-8.3	-5.4	51.0	53.6
7월	-5.7	71.0	2.9	6.9	-11.8	-10.4	11.9	-8.3	27.1	21.0
8월	-4.4	73.2	3.6	5.6	-8.9	-19.4	-19.4	8.7	7.0	-3.2
9월	5.1	75.0	7.8	19.5	4.8	-6.4	63.7	23.5	30.6	39.1
10월	-1.3	71.4	4.6	3.2	4.2	-4.4	30.2	7.9	28.7	19.0

주 :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권1쇄 인쇄/2001년 12월 27일
1권1쇄 발행/2001년 12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